

Petrobras, 심해유전 투자 차질

브라질 의회 국정조사 임박 ... 탈세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Petrobras가 탈세 등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어 심해유전 투자유치 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간 폴라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브라질 의회는 국영 석유기업 Petrobras의 탈세 및 편법계약,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의회는 11명의 여야 의원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시한을 180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8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정조사위 활동이 최대 1년간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원장 선출, 증인 채택, 보고서 작성 방식, 조사내용 조율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Petrobras는 탈세 및 편법계약,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의혹을 받아왔으며, 특히 각종 선거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후보 가운데 50% 이상이 집권 노동자당 소속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돼왔다.

Petrobras는 국정조사 시행 소식으로 대서양 연안 심해유전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 컨설팅기업 EIG의 중남미 담당 전문가인 리사 비시디 연구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Petrobras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은 물론 심해유전을 포함한 유전 개발을 위한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제 세르지오 가브리엘리 Petrobras 회장도 “국정조사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심해유전 개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15>